

# 사 람 사 랑

회원통신 제78호 (2001/6/21)

## 인권운동사장방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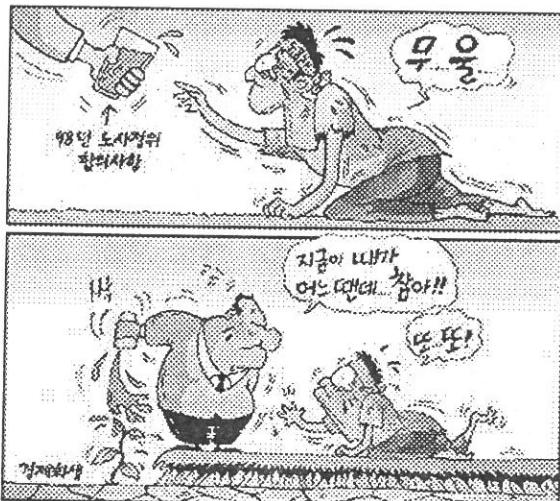
(110-522) 서울 종로구 명륜2가 8-29 4층

대표전화: 741-5363, 팩스: 741-5364

통신ID: rights(천리안) 인권사랑(나우누리)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mailto:humanrights@sarangbang.or.kr)

인터넷 웹사이트; <http://www.sarangbang.or.kr>



문화일보 만평

“너만 참으면 모두가 편해?”

## [주장] 노동자와 언론

# 국가폭력 부추기는 신문이 '일등'이라고?

이유경(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매체홍보부장)

최근 노동계 파업에 대한 언론의 악의적 왜곡보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6월 12일 항공사 노조 등 민주노총 소속 125개 사업장이 연대파업에 들어간 것에 대해 언론은 가뭄과 파업을 관련시키며 가뭄의 책임까지 교묘하게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태도를 보였다. 특히 조선일보는 이 날 <‘가뭄’속에 ‘명분’ 약한 연대파업>이라는 사설을 통해 “최악의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 온 국민이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계가 이를 외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노동계를 위해서도 혁명치 못한 처신”이라며 노동계를 비판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민주노총이 파업중인 레미콘 차량 100대를 파주에서 물 실어나르기 활동에 지원키로 했다는 사실을 외면한 ‘사실왜곡’에 기반하고 있다. 다른 언론 역시 민주노총의 가뭄극복 노력에 대해 보도하지 않았다.

6월 16일 민중대회 과정에서 발생한 동대문 경찰서장 부상과 관련해서도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 수구언론은 철저히 진실을 은폐·왜곡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민주노총 간부로부터) 어깨부분이 잡아 당겨지며 뒤로 넘어져 실신했다”고 단정 보도했고 민주노총의 입장은 간단히 인용하기는 했으나 동아 역시 경찰의 주장을 기정사실로 보도했다. 이 사건은 민주노총은 물론 병원관계자와 당시 현장에 있던 영상활동가들이 경찰의 주장이 과장·억지주장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어 진실규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진실규명을 위한 언론의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 대신 조선, 중앙, 동아일보는 각각 <‘勞鬪’ 이젠 달라져야>(조선), <민노총이 달라져야 한다>(중앙), <짜증나는 주말시위>(동아) 등의 사설로 노동계를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민주노총의 책임을 더욱 가중시켰을 뿐이다. 특히 조선일보는 “불법파업에 대해 공권력이 무력하다 보니...”라며 줄곧 공권력의 무력함을 비판하면서 입장을 되풀이했다. 또한 최근 유일하게 기획기사(‘노사 새로시작하자’)를 내보내고 있는 조선일보는 이날도 ‘공권력부터 변해야’라는 소 주제하에 <시위대에 매맞는 한국 공권력, 불법엔 가치없는 미·싱가포르>라는 제목으로 공권력의 ‘무력함’을 질타하고 있다. ‘국가폭력’을 부추기는 조선일보의 단면이다.

동대문 경찰서장 사건에 대해 과장·확대 보도하는 언론은 그러나 시위대의 부상이나 심각한 인권침해사태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일례로 4월 10일 대우자동차 노조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과 그로 인한 노동자들의 부상에 대해서는 언론은 늦장 축소보도로 일관했다. 중앙일보는 <대우차 격렬 시위 노조원 20명 부상>(4/11일자 사회면)이라는 제목으로 격렬시위가 부상의 원인인양 몰아가며 사태를 왜곡했고, 조선일보는 6일이 지난 뒤에야 마지못한 듯 <경찰 왜 갑자기 ‘과잉진압’>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내보냈다. 가장 늦게 사설을 쓴 경우다.

그런데 최근 두 달 넘짓 동안 드러난 한국언론의 반 노동자적·반인권적 모습이 ‘사실상’ 새삼스럽지 않다는 게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한다. 언론개혁이 이 시대 절대절명의 과제로 떠 오른 이유이기도 하다.

## 사람이야기 1. ——————

### 이 사람이 궁금하다 ‘윤광덕’<sup>1)</sup>

인터뷰하는 사람 : 박효원

효 : 1학기 마치고 휴학한 거야? 빠르네... 휴학하고는 뭐하고 있어?

광 : 난 대학에서 배울 모든 것을 1학기 동안 다 배운 것 같아요. 과나 학교도 맞는 거 같지 않구... 법학과는 집에서 가길 바란 거였고, 학교는... 아무래도 콤플렉스 같은 게 좀 있죠. 나중에 다시 수능보고 미학 전공으로 다른 학교 가려구요. 가서 한겨레 문화부기자 하고 싶은데... 뭐, 그래서 휴학했구, 요즘엔 친구들이랑 놀고 있어요. 이젠 노는 것도 지겹죠. ^~;

효 : 사랑방 시작한 게 3월달이었나? 어떻게 오게 된 거야?

광 :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씨네21에 김규항씨가 쓴 글을 읽었는데, 서준식씨의 말을 인용했어요. “보편적인 인권을 믿지 않는다” 그 말이 와닿았어요. 시작은 작년 11월 인권영화제부터였구요. 당시 일손이 제일 부족한 곳이었거든요. 끝나고 있다가, 3월달에 놀아줄 친구도 없어지고 사회권위원회에 들어왔죠.

효 : 원래 이런 쪽에 관심이 있었나 봐?

광 : 고등학교 때 많이 싸우고 다녔는데, 일본애들이랑 싸우다가 코뼈를 부러뜨려서 담임 선생님이 수치스럽게 사과를 했어요. 그 때 되게 화가 났는데, 친구가 이런저런 책을 권해 주더라고요. 그 친구 누나가 학생운동했다던데, 강준만씨 인물과 사상을 줬어요. 읽기 쉽고 재미있었죠. 대학에서는 집회도 몇 번 따라가 봤는데, 재미가 없었어요. 학생운동의 정파주의나 서열화된 문화도 싫었구요. 그래도 죄책감이랄까, 그런 감정들은 아직 남아있죠.

효 : 사랑방에서는 실망한 거 없었어?

광 : 재미있어요. 배우는 게 많아요. 이런저런 거 계속 잘 물어보게 되구. 밖에서는 그런 질문 잘 안 하는데. 그리고, 비정규직의 직접 사는 얘기를 들으니까 정서가 달라지는 느낌이예요. 요즘에는 강준만씨 글이 불편해요. 예전에는 젤 영향을 많이 받은 건데, ‘나는 어쩔 수 없는 부르주아이고, 어쩔 수 없이 김대중을 지지한다’는 얘기들이 결국 비정규직의 고통을 인정해버리는 거잖아요.

효 : 곧 군대 가지? 어떤 느낌이야?

광 : 7월 26일인가, 25일에 가요. 한지 얼마 안 되는데, 많이 아쉽죠. 다녀와서는... 사람이 변할 것 같아요. 한국사회에 맞게 개조되는 거 많잖아요. 돌아와서도 계속 할 생각이긴 해요. 아, 그리고, 여자들이 군인 조종하는 건 조금 섭섭해요. 여기 와서, 남자애들 군대 가는 거 깜깜하겠다는 말을 들었는데, 되게 좋았어요. 당연하다고 여길 줄 알았거든요. ^~

효 : 돌아와서도 계속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가기 전에 환송회 거나하게 해야겠다. 히히~

1) 윤광덕 씨와 박효원 씨는 대학생이면서, 사회권위원회 소속 자원활동가들입니다.

## 사람이야기 2. —————

# 월례포럼2) 사회를 보고 나서

범용(인권하루소식 기자)

나는 우연찮은 계기로 이번 월례포럼의 사회를 맡게 됐다. 월례포럼이 예정됐던 주의 월요일로 기억한다. “범용, 이번 월례포럼 사회 한번 보지 않을래?” 이 제안을 던진 선배의 눈빛은 흡사 사회를 찾아 사랑방을 헤매는 하이에나와 같았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난 그 제안에 ‘싫다’고 말하지 않았다. 꼭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한국사회에서는 싫다고 표현하지 않는 것은 암묵적인 동의로 간주되곤 한다! 결국 내가 사회로 낙점을 찍히게 된 것은 위의 제안이 들어온 지 1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였다.

내가 사회라는 사실 때문일까, 아니면 국가보안법이란 문제 자체가 가진 고루함 때문일까? 6월 9일 월례포럼 당일 참석인원은 열 손가락으로 세어봄직 했다. 하지만 이런 적은 인원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가족적인 분위기와 진지한 토론으로 이어졌다.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홍순석 사무총장은 “현재 통일교류는 급속한 물꼬가 터진 듯하다”면서도, “국가보안법 투쟁이 (정권에 의해) 너무 밀린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통일운동을 둘러싸고 진보진영끼리의 대립이 줄고 기득권 세력간 이견과 대립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6·15 공동선언 이후의 특징을 분석했다. 홍 사무총장은 “국가보안법은 남북관계가 잘 풀려 간다고 해서 저절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민중진영의 투쟁이 더 절실을 호소했다. 또 한명의 발제자였던 한총련 서진수 대외협력국장은 “올해 한총련의 핵심목표는 6·15 공동선언 이행과 한총련 합법화”라며, “특히 이적규정 철회를 위해 한총련 학부모총회를 개최했고, 대통령과의 직접면담을 신청하기도 했으며, 이적규정 철회와 한총련 간부수배문제에 관한 국민대토론회를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제가 끝난 후 질문이 이어졌다. 류은숙 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은 “사상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을 전개해 나갈 때만이 공안세력에 대한 정면돌파가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홍 사무총장은 많은 부분 공감을 표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홍 사무총장이 류 사무국장의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추후 평가했다.

한편, 배경내 인권운동연구소 상임연구원은 “한총련은 자신의 이적규정 철회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서진수 대외협력국장은 “올해는 6·15 공동선언 이행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며,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투쟁은 그 일환으로 사고한다”고 답변해, 여전히 이적규정 철회 문제를 통일정세의 하위범주로 사고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나는 국가보안법 문제가 무척 중요하면서도 현실에서는 외면받는 사안이라는 점을 이번 월례포럼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에는 뱉을 수도 삼킬 수도 없는 뜨거운 감자로서의 특성만이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 봤다. 그리고 ‘그래도 나는 삼켜야지’ 하고 다짐했다.

2) 인권운동사랑방의 6월 월례포럼 주제는 ‘6·15 공동선언 1주년과 국가보안법’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월례포럼은 의외로 성공적(?)으로 끝났고, 많은 사람들이 “사회를 참 잘 봤다”고 의외의 격려를 했다. 하지만 나는 다른 상임활동가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더 이상 사회를 볼 생각은 없음을 이 지면을 빌어 밝힌다. 문득 도울이 훌연히 자신의 강의를 접었던 기억이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

## 인권운동사랑방 부설 인권운동연구소 2기 비상임연구원 공개모집

- 비상임연구원은 자신이 원하는 세미나에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선택 과목은 제한이 없습니다. 몇 개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 : 제출서류 - 이름, 나이, 연락처, 인권운동 경력, 현재 하고 있는 일, 참가 세미나명 등을 담은 자기소개서(A4 1매)
  - : 제출마감 - 2001년 7월 5일(목)
  - : 제출방법 - ihrm@sarangbang.or.kr 또는 팩스(02-3676-1302)
- 2기 개강 일정
  - : 오리엔테이션 - 7월 12일(목) 오후 7시
  - : 개강 - 2001년 7월 19일(목)
  - : 문의 - 02-3675-5363/02-3676-1301/ihrm@sarangbang.or.kr/배경내, 박래군
- 세미나 개요 -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www.sarangbang.or.kr](http://www.sarangbang.or.kr)) 첫 화면의 인권운동연구소를 클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꼼따 쿠투**

이동수

\*꼼따란, 꼼꼼히 따지며 살자'의 준말이에요^^..

## 인권교육실

**21세기를 인권의 세기로! 우리는 지금 인권의 세계로 간다!**

3회 인권운동사랑방 어린이 인권캠프

### "인권과 친구하기 2001"

Human Rights Camp 2001

때 : 8월 8~10일 (2박3일)

곳 : 경기도 양평 청운인성수련원

참가대상 : 초등학교 4-6학년

(선착순 30명)

참가비 : 6만원

#### • 어린이 인권캠프란?

인권에 대해 아는 것은 인권보장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인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는 인권을 가르치고 배울 수 없겠지요.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과정 속에서만 인권의 가치와 소중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인권캠프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 2001 교사를 위한

### 인권교육 워크샵

때 : 2001년 7월 26일 ~28일 (2박3일)

곳 : 예수살이 공동체(서울 합정동)

참가대상 : 초·중·고 교사

(선착순 30명)

참가비: 5만원(숙식, 자료집 포함)

#### • 주요내용은요!

인권이란 · 인권교육이란 · 인권교육방법론 실습 · 커리큘럼 설계 · 기존 교과목과 인권 교육의 접목 · 인권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방법 등입니다.

#### • 인권캠프에서는요!

모두가 주인공입니다. 놀이, 역할극, 춤, 그림, 영상, 문화활동 등을 활용한 참여 중심적 교육과정을 통해 사람과 인권의 소중함을 체험하고 인권을 옹호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합니다.

캠프의 전 과정은 참가자들의 자율적 의사와 선택을 존중하면서 이뤄지며, 이를 통해 인권의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 • 인권캠프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나와 같으면서도 다른 친구들 · 차별은 싫어요 · 영상인권이야기 · 인권체험놀이 · 어린이의 인권 · 세계의 약속 · 우리가 만드는 세계인권선언 · 주제가 있는 캠프파이어… 우와~ 참 신나겠다

#### ● 참가신청 ●

인권교육실: 류은숙, 고근예

전화: 741-5363 팩스: 741-5364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mailto:humanrights@sarangbang.or.kr)

#### • 인권운동사랑방이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워크샵을 하는 이유는?

최근 인권교육에 대한 관심과 실천의지가 높아지고, 특히 학교현장에서 어린이 · 청소년을 위한 인권교육을 실험해보고자 하는 교사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권교육의 구체적 내용과 기법에 대한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교육과정을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인권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전문성을 기르고 인권교육의 경험을 공유하는 교육과정의 장으로 이번 워크샵을 마련합니다.

# 사/업/보/고

(2001년 5월 넷째 주- 6월 셋째 주)

## 감옥의 인권

- 감옥팀 홈페이지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자원활동가 박현우씨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7월이면 '감옥' 홈페이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감옥과 관련된 법령 및 정리된 사건, 사랑방의 활동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감옥과 관련된 신문기사의 단골메뉴 중 하나는 재소자들의 폭력으로 교도관 생활이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달 국민일보 박충근 기자는 한 교도소에서 재소자가 진료요구를 하다 교도관을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재소자의 폭력으로 교도소가

질서도 안 잡히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를 읽던 우리는 그 재소자의 병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교도관의 상태는 어떤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박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어느 교도소에서 생긴 일인가 물었습니다. 이에 박 기자는 말바꾸기를 계속 하더니, 끝내 문제의 교도소를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랑방은 취재내용을 '박기자의 재소자 죽이기'라는 제목으로 인권하루소식에 기사화했습니다. 그러자, 언론비평매체인 <미디어오늘>이 이 사건을 기사화했고, 월간 <말>지도 하루소식 기사가 소개됐습니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박 기자는 <미디어오늘>을 상대로 손해배상

## 새로 나온 자료모음(인권정보자료실)

- 판례상 인정된 이적표현물 목록(도서, 유인물)
- 민주이념연구소 관련 자료
  - ①감정건수 통계자료 ②민주이념연구소 운영규정 ③민주이념 창간호, 1호
- 양민학살-노근리 관련 기사모음 (연합신문 1999. 9. 26-10. 26)
- 새만금 자료
  - ①농림부의 새만금 사업 추진 현황 ②새만금 사업을 반대하는 부안사람들의 이유/ 새만금 개발사업을 통해 본 발전과 인권의 문제/ 생명평화연대, 환경운동연합의 의견 ③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자료 모음
- 과학기술과 인권
  - ①유전자 프라이버시법과 해설 중 서문 ②유전자가 세상을 바꾼다 ③인권과 유전공학-'인간개념과 인권에 관한 보편선언'을 중심으로 ④생명공학 기술과 인권 ⑤개인유전정보의 활용과 인권침해 ⑥책임있는 유전학을 위한 회의
- 과학기술과 인권
  - ①생명공학기술과 인권 ②에너지 기술과 인권 ③정보통신기술과 인권-사이버 권리와 법적 권리 ④지적재산권과 인권 ⑤과학기술자의 인권과 사회적 책임 ⑥과학기술과 인권 ⑦과학기술과 인권-NGO의 역할
- 자료가 필요한 분은 연락바랍니다. (문의 : 최은아 angelica-choi@hanmail.net)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따라서 이 사건은 법정공방으로까지 비회됐습니다.

● 최근 일부 교도소들이 재소자와 변호사와의 접견을 잇달아 불허하고 있습니다.

접견을 통해 여러 번 소송의사를 밝혔던 목포교도소 김아무개씨. 5월 20일경 박승옥 변호사가 접견을 신청했으나 교도소 측은 '기결수의 경우, 재심청구를 제외한 변호사 접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허했고, 며칠 뒤 박 변호사가 재심청구를 위한 접견을 다시 요청했으나 그마저 거부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수원의 김칠준 변호사도 대전교도소에 수용중인 재소자를 접견하려다 불허당했습니다. 교도관의 부당징벌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대전교도소가 변호사 접견권을 불허한 것은 뭔가 캉기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서 전주의 조두연 변호사도 전주교도소에 수용중인 재소자 접견을 불허당한 바 있습니다. 변호사와 재소자의 접견을 막는 것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들은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을 고려중입니다.

## 전자건강카드 반대운동

전자건강카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보건복지부가 현행 의료보험증을 '전자 또는 자기화된 카드'로 전환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자건강카드가 김영삼 정부 시절 추진됐던 전자주민카드와 동일한 인권침해 소지와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IC 칩 카드에 내장되는 각종 개인정보(이름, 혈액형, 병력정보, 진료내역 등)는 결코 해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이 좀 더 용이해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한 개인에게 치명적 피해를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또 전자신분증이 제도화된다는 것은 각종 사생활이 전자기록으로 남게되는 시대가 멀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자건강카드 사업에 드는 막대한 비용은 결국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갈 수밖에 없고, 결국 국민들은 '돈 대주고 정보 퍼주는'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그 이권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전자건강카드를 도입하려는 것인지 그 '속내'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방을 비롯해 사회단체들은 전자건강카드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 사회권위원회

● 5월 11일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 이후 후속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유엔의 권고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감시하는 활동입니다. 그런데 잠시 한숨을 돌리기가 무섭게 정부가 노동자들의 파업에 강경하게 대처해 답답함을 안겨줍니다. 파업을 범죄시하고, 경찰력 투입·형사 탄압을 일삼는 정부의 행태는 유엔 사회권 위원회의 권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방이 소속되어 있는 '사회권 규약 제2차반박보고서 연대회의'는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력 탄압을 중단하고 사회권 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뒷면 성명 참조). 6월 27일에는 사회권과 관련된 정부 관계부처들과 권고를 어떻게 이행할 지에 관한 협의 회의가 열립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과연 실질적 이행을 강제할 협의를 기대할 수 있을지 고개가 가우뚱해집니다.

● 비정규직팀은 매주 한번씩 비정규 노동

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비정규 노동자 사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레미콘 노동자,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 재능 교육교사 노동자, 흥의매점 노동자를 만났습니다. 좀더 다양한 각도로 사례를 모은 뒤, 비정규 노동자의 상황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인권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비정규 노동자들을 만나면서 우리들의 의식도 조금씩 자리남을 느낍니다.

## 인권영화제

지난 5월 18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되었던 5.5 인권영화제-다시보는 명작선은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올해 가장 큰 변화는 무엇보다도 시기를 봄으로 옮긴 것이었습니다. '5월개최'는 반응이 좋은 편이었고 극장 상영도 인권영화제로선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아트큐브가 무척 작은 소극장이었지만 시설이나 교통이 편리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다만 인권영화제가 너무 '우리 으리한' 곳에서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생소함에서 오는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료대관'이었기 때문에 경비의 지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영화제 운영원칙에 어긋나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프로그램은 대체로 좋은 평가를 얻었습니다. '명작선'이 혹시나 재당의 이미지를 주지 않을까 우려했었는데 오히려 감상기회를 놓친 많은 분들에게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에르네스토 체 게바라, 볼리비아 일기> <칠레전투> <대지의 소금> <하비밀크의 시대> 등은 좌석수의 두 배가 넘는 관객들로 가득 찼고, 극장 바깥에 설치해 둔 TV모니터 앞에도 관객들이 빼곡이 들어앉은 진풍경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간의 해묵은 분쟁을 고찰해보는 이슈포커스에도 많은 분들의 관

심이 집중되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의 유혈 사태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한 때였기에 더욱 시기 적절했습니다. 개막작 <세 개의 보석이야기>를 비롯해 11편의 영화들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독립영화인들이 제작한 '생생한 그 곳의 현실'들이었습니다.

5.5 인권영화제는 영화를 통해 '인권'을 보다 광범위한 대중들에게 소개하는 인권영화제의 임무를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초심을 잊지 않고 새로움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올해 영화제 후원회원은 1백여 명 정도였으며 영화진흥위원회 영화단체지원사업에 확정되었습니다. 지원금은 760만원입니다.

## 국가인권위 설립 대응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벌써 청와대에서 인권위원장은 내정했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지난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인권위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 '낙제법안'이라고 평가하며, 인권위법 수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권위 설립 과정을 냉놓고 방치할 수만은 없기에, 최대한 바람직한 인물이 인권위원에 임명되고 올바른 시행령이 제정되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그 첫 출발로 인권단체들과 공동으로 '인권위원회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인권하루소식>은 인권활동가 및 법조인, 교수, 언론인 100명에게 '인권위원장 및 인권위원에 적합한 인물'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설문 결과, 전 민변 회장이었던 최영도 변호사가 '인권위원장에 가장 적합한 인물'로 꼽혔습니다.

## [자료] 노동계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 관련, 인권단체 기자회견문

날마다, 그리고 말끝마다 '구속·수배·엄단'이다. 그리고 그 대상은 조폭이나 마약사범이 아닌 '노동자'이다. 왜 정부는 노동계를 향해 칼을 빼들었는가? 김대중 정권의 실정에 등을 돌린 노동계에 대한 분풀이인가? 노동자에게 쥐어준 것이 없는 정권이기에 그에 대한 추궁을 받자 오히려 버럭 화를 내는 것인가? 대화와 타협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기에 힘으로 해결하자는 것인가? 김대중 정권의 노동자 사냥은 기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옹호와 실현을 외쳐온 입과는 전혀 다른 행동이기에 우리 인권단체들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구태(舊態)를 재발견하며 쟁탈함과 분노를 참을 길 없다.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한 노동계 지도부에 대한 일제 검거령은 분명 시대착오적인 폭거일 뿐이다. 이같은 발상은 노동운동의 씨를 말리겠다는 매우 위험하고도 가당치 않은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장시간·저임금 노동에 허덕이는 비정규직 노동이 확대되는 한, 그리고 사용자의 불법 부당 행위 앞에 노동자의 모든 권리가 짓밟히고 있는 한 결코 소멸될 수 없는 것이 노동운동임을 정부는 알 것이다. 정부의 지도부 검거령은 불 난데 부채질하는 형국으로 노동자들의 분노를 키우기만 할 것이 불을 보듯 명백하다.

집회·시위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압박은 중단되어야 한다. 바로 어제 경찰청장은 '폭력 시위가 우려된다'는 이유를 내세워 앞으로 도심 주요도로에서의 집회·시위는 신고단계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할 거라고 발표했다. 정부의 현 사고방식대로라면 대한민국에선 파업도 시위도 집회도 존재할 수 없다. 폭력시위에 대한 우려만으로도 무조건 금지요, 집회의 내용 자체에는 일절 관심이 없는 평화시위 타령이 정부의 레퍼토리다. 파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불법 파업이므로 엄단하겠다'는 여론공세를 취하고, 초를 다투어 공권력을 투입하고, 해산 후에는 지도부를 사법 처리하는 것이 정부의 법칙이다. 이같은 형국에서 노동자들이 빠져나갈 구멍은 없다. 생존할 권리와 외치는 노동자들에 대해 집회·시위 및 결사의 자유 박탈로 맞서려는 정부의 근시안적 정책은 수정돼야 한다.

이제라도 정부는 노동계에 대한 선전포고를 철회하고 진지한 의견 수렴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 지난 5월 유엔의 중요한 인권기구인 사회권위원회는 "파업행위를 범죄시하는 (한국) 정부의 접근방식은 전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 지적하고 "파업권을 행사하는 노조에 대한 형사소추를 중지할 것"을 우리 정부에 촉구했다. 그러나 이런 유엔 인권기구의 권고에 배치되는 상황은 계속 벌어지고 있다. 대우차와 울산 효성 공장에 대한 경찰력 투입,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핵심 간부들에 대한 검거령, 파업을 끝낸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집행부 구속, 파업중인 병원 노동자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 여기서 드러나는 정부의 태도는 노동조합을 범죄조직으로, 노동자를 조직폭력배로 취급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인력감축 위주의 일방적 구조조정으로 고통받아온 노동자들을 더 이상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

이에 우리 인권단체들은 김대중 정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단병호 위원장 등 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한 일제 검거령을 철회하라.
-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 정부는 노동계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진지한 의견 수렴과 대화에 나서라.

2001. 6. 19

NCC인권위원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국제민주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된 의료실현을 위한 청년의사회,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광주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북평화인권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 2001년 5월 회계 보고

(2001년 5월 17일 - 6월 16일)

이월금 :		76,377원	
수입	지출		
<b>사업수익</b>	<b>2,881,070원</b>	<b>사업비</b>	<b>1,246,470원</b>
-하루소식	2,002,020원	-하루소식 우편발송	206,020원
구독료(121명)	1,745,240	-하루소식 취재비	50,000원
기사배급	256,780	-자료제본 및 구입	54,520원
-간행물 판매	392,500원	-감옥인권팀	55,080원
인권교육집잡이	15권	-자유권위원회	16,850원
인간답게 살 권리	7권	-사람사랑 제작발송	109,110원
하루소식 합본호	5권	-월례포럼 강연료	100,000원
한국감옥의 현실	3권	-인권단체 세미나	166,180원
현대사상과 인권	1권	-병역거부권 토론회 주최	40,000원
국가보안법 보고서	1권	-국보법 보고서 제작	308,000원
인권은 교문 앞에서	1권	-자원활동가 모임	114,710원
불심검문자료집	4권	-6·10행사 참가	26,000원
-자료제공비	163,630원	<b>활동비</b>	<b>4,900,000원</b>
-강연료	270,000원	사무실유지비	947,840원
-방송출연료	52,920원	통신비	1,046,000원
<b>후원금</b>	<b>5,316,620원</b>	사무비품	315,200원
-정기후원	4,916,620원	사무국 식비	323,080원
-기타후원	400,000원	생활비	130,500원
<b>상임활동가 기여금</b>	<b>810,000원</b>		
은행이자	13,169원		
<b>총수입:</b>	<b>9,020,859원</b>	<b>총지출:</b>	<b>8,909,090원</b>
<b>잔액:</b>	<b>188,146원</b>		
<b>부채:</b>	<b>700,000원</b>		

### 특별사업기금 사용내역

- 이월 : 3,543,670
- 지출('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 : 45,000원
- 잔액 : 3,498,670

### 〈2001년 5월 재정 세부사항〉

- 지난달 임현규 님등 서울대생 11명이 보내주신 3백만원을 컴퓨터 교체와 전산용지 구입 등 각종 사무기기·비품 구입에 전액 사용했습니다. 이 내용은 결산내역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 사랑방의 후원자 가운데엔, 여전히 익명의 후원자들이 많습니다. 이달에도 5천원부터 10만 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이 정성을 보내주셨습니다. 경기도 양평에 살고 계시는 심은희 님은 지난해 '어린이인권캠프'에 참가했던 자녀가 많은 변화를 보여 감사하다며, 서울까지 직접 찾아와 후원금을 기탁해 주셨습니다.
- 인권영화제 기간 동안 상영관 앞에서 열심히 인권간행물 판매에 나선 덕택에, 간행물 수익이 많이 늘었습니다. 주위에 인권간행물을 널리 홍보해주시는 것도 사랑방 재정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가 조만간 설치됩니다. 때문에 인권운동사랑방은 다산인권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와 함께 국가인권위 설립에 대비하는 '인권단체 공동세미나'를 매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세미나 장소대여비를 비롯한 지출이 추가됐습니다.
- 민변 등과 함께 '2000년 국가보안법 보고서'를 발행한 비용이 이달 지출내역에 포함됐습니다.

**<5월 후원금 납부 감사합니다> (가나다 순, 6/16일까지)**

